

4.30 정치대회, 휘청이는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자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정치

강원지역 노동자들은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민주당과의 단일화선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버스노동자들은 지역토호세력들과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민주당에 전면 투쟁을 선포하며 분당으로 상경했다. 제주도 노동자민중은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 정치세력들은 노동자의 절규와 투쟁에 침묵한 채 4.27 야권연대를 선언하며 지분나누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진보정치가 노동자의 요구, 투쟁을 짓밟고 있는 자본가정당과 연합하면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아직은 힘이 부족하니 표를 더 달라'는 뻔뻔함과, '야권연대를 통해 MB를 심판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위선적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투쟁과 정치를 자본가정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선의 정치, 기만의 정치를 끝장내고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야 한다.

계급투쟁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유일한 무기다

선거를 통해 MB를 심판하면 이 참혹한 사회가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은 다른 대안을 말하고 있다. 아랍에서 민중들은 살인적인 물가와 실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불씨가 되어 거대한 봉기 물결을 만들었다. 노동자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총파업으로 봉기에 결합해나갔다. 거대한 계급투쟁이 국경을 넘어 전파됐고, 독재자와 자본가의 잔혹한 탄압을 뚫고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며 정치·경제적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우과정권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한 유럽에서도 노동자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노동자들이, 중국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꾼다 해도 소용없다. 노동자의 강력한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를 끝장내는 계급투쟁이 아니면, 털끝만큼도 바뀌낼 수 없다. 계급투쟁이 이 현실을 바꿀 유일한 무기이다.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으로

정치세력화운동에 새로운 역사를 열자

진보대통합은 대안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의 가교 역할에 불과한 진보대통합을 노동자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 진보정당들은 6월 진보대통합을 결의하고 9월에 통합진보정당을 선언하겠다고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새로운 역사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실현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흔들림 없이 조직하는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계급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 4.30 정치대회는 바로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 실현을 위해 노동자 스스로 결의하는 장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며 진보정치가 더럽힌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 건설운동이 전면화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철폐와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낼 정당, 의회주의-개량주의로 점철된 사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권력을 쟁취할 정당운동이 필요하다. 이것

이 바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다.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끊어내기 위해 사회주의를 투쟁의 무기로, 현실로 등장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한 당 건설운동을 결의해나가자. 4.30정치대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이 될 것이다.

4.30정치대회로 모이자!

자본주의를 끝장낼 노동자의 대안 만들기를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이미 투쟁하고 있다. 분노는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시급하게 분노를 조직할 불씨를 만들어내야 한다. 2011년 야권연대로 노동자정치를 변질시키는 이 기만과 반동의 정치를 바꾸자. 노동자민중들의 절망을 분노로, 투쟁으로 만들자. 노동자계급정치로 자본가들의 정치판을 엿자. 그래야만 노동자민중이 산다. 그래야만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며 차별과 착취, 억압과 배제를 감내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이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에 침묵하는 전체 노동자들이 일어설 수 있다. 비로소 노동자민중의 숨통이 열린다.

진보정당이 더럽힌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노동자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안사회를 고민하면서 아직 막연하지만 사회주의를 동의하는 사람들, 2011년 노동자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정치를 결의하자. 2011년 계급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결의하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현실로 만들어 내자. 4.30대회로 모이자!!

선지현



[사노위 정치강좌 참가기]

새로운 길을 찾다

비극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수많은 노동자·민중.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다. 차별받지 않고, 일 때문에 병들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일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지 않고, 결국 일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불행을 양산하는 토대를 부수고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런 사회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자본주의 철패를 위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라 말할 것이다. 이어나 이 답은 쉽지 않다. 자본의 탄압보다 국가의 폭력보다 더 큰 고통은 낡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이라고 당당하게 노동자 대중에게 말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 그 때문에 양산되는 사회주의의 알맹이를 빼어 쓰면서도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온갖 개량주의와 공상주의적 대안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당운동’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당과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라는 글이 발제되었고, 관심 있는 동지들이 함께하였다.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한 강령작성의 중요성과 노동조합 내부 관료주의와 투쟁이 강조된 발제문은, 노동자계급이 만드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과 그 토대 위에서 당의 역할을 고민해볼게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발제된 내용이 당 건설을 위한 내부 강령토론에 제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는 점이다. 당 건설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토론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토론이 프로그램 상 준비되어 있다 해도 대중에게 개방된 ‘강좌’에서, 사노위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방법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보다는 현재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대안이 왜 사회주의인지, 그것을 위해 왜 사회주의당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인식시키는 것부터(설령 그것이 너무 당연해 불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지더라도) 필요하진 않았을까? 사회주의당 건설이 시급한 점도 분명 있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기반을 넓히는 준비들이 현재 필요하진 않을까? 강좌를 그런 기회로 이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고민들이다.

서울지역 정치강좌 참가자 이상배

사노위의 정치강좌가 4월 6일, 13일 평택지역에서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 쌍용차, 두원정공, 한라공조, 만도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1강으로 진행된 ‘신비판론으로 전락한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을 들면서 쉽게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정당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도외시하고 몇몇 정치인들에게 노동자들의 문제를 떠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감이 공존한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의 연합, 그리고 그 전제인 진보대통합은 진보진영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기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작년 평택 시장선거에서는 에바다 학교 비리재단을 비호했던 김선기 민주당 시장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반MB 대연합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두원정공 노동조합은 민주당과의 연합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을 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이기도 했다. 요즘 쌍용차 투쟁에는 민주당의 정동영이 와서 한나라당을 무찌르자고 한다. 쌍용차는 민

사노위 부산의 정치강좌 3강 중 2강이 끝났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좋았다. 함께해 준 지역의 동지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하지만 보다 많은 지역동지들이 결합해 노동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아직은 사노위 부산회원들의 고민이 지역 동지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정치강좌 자체가 드문 부산에서 사회주의 정치강좌가 열리고 지역의 동지들이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싶다.

더구나 20세기 사회주의평가와 관련해서는 보기 드물게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예상 밖의 뜨거운 논쟁을 보며,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번 정치강좌가 우리가 하

주당 시절에 상하이에 매각되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세력의 집권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연 민주대연합이 노동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강은 ‘새로운 대안사회, 사회주의를 말한다’라는 주제였는데, 사회주의에 대해 쉽게 해석해준 것 같다. 우리가 현장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화두인데, 강사가 많은 준비로 쉽게 설명했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강에서는 사노위 당건설의 일정 등에 대한 질문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구체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제기 등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노위의 활동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강령이 쉽게 만들어져서 현장의 노동자들도 사회주의나 사노위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430 대회 때 전국의 많은 현장 동지들과 사회주의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택지역 정치강좌 참가자 엄정흠

고 싶은 이야기만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본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갈망하는 고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사노위 부산회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열심히 노동자들과 호흡하고 함께할 때만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같이 토론하고 함께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이란 반성도 가져본다.

사노위는 430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노위 부산이 지역의 작은 서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보다 분발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져본다.

부산지역 정치강좌 참가자 하계진

새로운 길을 찾다

1.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2. 민주노동당 (서울) 3. 진보당 (서울) 4. 노동당 (서울) 5. 민주노동당 (서울) 6. 진보당 (서울) 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8. 민주노동당 (서울) 9. 진보당 (서울) 10.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11. 민주노동당 (서울) 12. 진보당 (서울)

사노위 정치강좌

“사회주의 정치대회에 함께하자.”



“버스파업을 통하여 노동부, 전주시청, 전북도청, 공권력은 버스자본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를 가장한 민주당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알았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투쟁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을 알았고 ‘사노위’ 정치신문을 통하여 ‘사회주의’가 대안임을 알았다.” 전북지역 버스파업노동자의 말이다.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승리하였지만 택시자본의 민주노조 말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긋 지긋한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하나?” 1년간 민주노조건설 투쟁을 진행해 왔던 전주지역 택시노동자의 말이다.

2011년 메이데이를 맞아 비정규직 철폐 투쟁, 최저임금 투쟁, 민주노조 사수 투쟁, 정리해고 분쇄 투쟁 등 야만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 착취에 맞선 방어적 투쟁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 절박한 구호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일어나 자본주의를 넘어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 노동자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투쟁만이 그 구호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회주의 정치 투쟁이다. 수십 일씩 곡기를 끊어야하고 감옥에 가야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하는 더러운 세상. 목숨을 걸어야만 우리의 요구가 세상에 알려지는 잔인한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이 우리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동지들이여!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가자!

어느 수필가는 청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뻐다고 했던가! 내게는 사회주의가 그렇다. 세상에 내놓고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당히 사회주의를 내건 정치대회가 4월 30일 오후 6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 사회주의 정치대회에 함께하자.

전북 회원 이삼형

지난 달 장애인 열사 추모제 때, 장애인 동지들이 뜨거운 기염을 뿜어내는 한강대교를 신체의 일부이기까지 한 휠체어에서 내려와 맨 몸뚱아리로 걸어가는 영상이 나왔다. 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철사로 몸을 버스에 또는 동지들끼리 엮은 채로 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장면도 나왔다. 그 잔인한 장면 속에서 ‘도대체 누굴 위한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탄식은 끊이지 않았다.

자본가들의 착취와 악랄해진 노조와해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결국 단식으로, 고공 농성 등으로 자신들의 투쟁의 절박함을 알려내고 있다.

비단 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민중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몇 년 전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430문화제 상징의식 때 공권력에 의해 쓰러진 노동자들이 ‘들불의 노래’에 맞춰 하나둘 씩 일어나 저들의 비호아래 있던 탑을 부수고 마지막엔 인터내셔널가와 함께 승리의 춤을 춰고, 역시 무대 앞에 있던 노동자들도 팔뚝질로 힘 있는 목소리를 실었다. 각자 다른 깃발 아래서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를 가진 자들이 인터내셔널가라는 하나의 노래에 맞춰 힘차게 팔을 내휘두르는 모습은 흡사 강하고 당찬 노동자 군대를 연상시켰다.



이후 매년 430은 다가왔고 올해 또 한 번의 430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나의 작고 작은 힘이라도 물 잔에 한 방울의 물이 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물이 넘쳐 넘쳐 흘러 시청 재능에도, 그 옆의 발레오에도, 전주에도, 울산에도 끝없이 흘러가길 바란다. 놀려있던 “자본주의 철폐”를 목청껏 내질러 보자.

서울 새로고침 김태연



지난 해 5월, 사노위가 출범했다. 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트리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세상을 가져올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들과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당건설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결집하였다. 1년여의 사노위 활동은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었지만 이 땅에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세계자본주의 모순의 폭발로 위기를 맞은 자본가들의 마지막 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죄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은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로 점철된 행보를 보이며 노동자계급의 기대를 배반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의미를 축소하고, 변질시켰다. 진보정당의 움직임을 보면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은 더 절실한 요구가 되고 있다.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을 위해, 거짓환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과 열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뜻을 확인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바로 4.30 정치대회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현실로, 노동자계급정치를 투쟁의 무기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투쟁하는 이들이 4.30 정치대회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4.30 정치대회를 통해 모아진 의지와 그동안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어 온 당건설의 실천을 결집시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를 힘 있게 건설하자!

충북 회원 김기연

[강령 논쟁]

[편집자 주] 사노위는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초초안을 놓고 토론 중이다. 이에 3가지 견해를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하려 한다. 독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번 주제는 '여성, 생태,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이다. 필자에 따라 분량 상 각각의 주장을 모두 다루지 못하거나, 소상히 다루지 못한 점을 독자들께서 이해하시길 바란다.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지 같이 고민하였으면 한다.

1.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성격 규정과 태도, 평가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방향

2. 혁명의 주체형성 전략

3. 여성, 생태, 소수자 대한 태도

4. 전쟁, 한반도에 대한 태도

노동자당의 강령은 페미니즘 여성단체나 생태주의 환경단체와는 달리 여성 억압과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당의 강령은 여성 문제와 생태 문제를 계급모순 철폐 이후의 과제로 미뤄두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계급투쟁과 무관하게 의식 개조(예를 들어 가부장적 의식 개조)나 관점 교정(자연에 대한 잘못된 관점 교정)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몰계급적인 접근법을, 노동자당이 노동자계급의 투쟁방법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몰계급적인 의식개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문제!

노동자당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이 여

성억압을(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유지시키는 이 체제를 타도하는 데 결정적인 이해관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직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가난한 농민과 도시빈민층의 여성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 모든 사회적 억압의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 -- 를 위한 투쟁으로 이끌려 올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계급 운동은 언제나 모든 억압과 불평등, 차별에 맞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개량주의 정당이나 관료적 노조 등 기존 노동자 조직들은 이 같은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의 임무는 노동자 대중조직을 이러한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억압·환경 파괴에 맞선

노동자계급운동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을 비롯한 피억압 층들이 스스로의 조직(노조나 당 내에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같은)을 만들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피억압 층들의 요구를 노동자계급 전체가 받아 안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피억압 층들이 겪는 고유한 공통의 경험으로 인해 여성운동, 동성애자운동, 청소년운동, 장애인운동, 이주자운동 등 각각의 부문적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혁명적 노동자당은 이들 운동의 지도력을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이나 사민주의자들에게 내맡길 수 없다. 사회적 억압에 맞선 공동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이 공동전선은 집회와 시위, 파업과 점거 등 대중투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은 이러한 전술을 통해 피억압층 운동을 자치주의·부민주주의적 방향 또는 계급협조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혁명가들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을 비롯하여 노동계급적인 피억압층 운동을 건설하고, 이 운동 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의 지도력을 위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억압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리주의 경향, 인민전선주의 경

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의 목표는 피억압층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핵시설 및 핵 안전문제에 대한 노동자통제 투쟁

환경 파괴에 맞선 투쟁과 관련하여서도 노동자당의 강령은 녹색당이나 환경시민운동과는 달리 일차적으로 계급투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전(핵시설)에 대해 단순히 '폐쇄하라'는 선언적 요구로 그쳐선 안 된다. 핵 재앙에 맞선 투쟁의 과제를 노동자들에게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기 위한 선전선동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는 강령이어야 한다. '폐쇄냐 아니냐' 논쟁에 갇히지 말고 실제 핵시설 폐쇄를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과 전술의 문제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한다.

핵발전소를 비롯한 핵 시설을 최대한 신속히 폐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통제가 필요하다. 자본가정부와 기업이 틀어쥐고 있는 핵 시설에 대한 모든 '기밀'과 정보, 점검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핵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표자들, 현지

여성, 생태 문제는 계급해방만으로 자동 해결되지 않는다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성은 억압, 차별, 소외되어 왔다. 자본주의에서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견고한 결합 속에서 여성 억압과 차별은 재생산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로 자본에 초과착취당하고 있다. 기혼여성 노동자는 여기에 덧붙여, 가사·육아노동 등 재생산노동을 무임으로 행하며, 이중 노동(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여성해방은 이뤄질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여성억압과 차별이 이뤄지는 공간은 직장(노동)과 가족 안에서만 아니다. 여성의 몸과 성과 사랑을 매개로, 이데올로기로, 법·제도·관습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폭력인 성폭력,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 여성차별적 성별분업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남녀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는 계급해방과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만으로는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억압적 법제도를 철폐하고,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철폐하며,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와 가사·육아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해방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가부장제와 성별분업구조가 유지되면서, 러시아의 여성들은 지금의 자본주의 여성과 비

슷하게 직장가정에서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즉 러시아혁명의 경험은 자본주의 극복만이 여성해방의 근본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극복이 자동적으로 여성해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에서 여성해방의 미완성은 스탈린주의 반혁명 때문이 아니라,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유지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운동의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생태파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연파괴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가 세계적이고 그 파괴의 수준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반생태 체제이다. 이는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보다 많은 생산과 보다 많은 소비체제'를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게다가 생태파괴의 결과가 모든 계급에게,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생태파괴의 영향은 이 피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빈곤층과 제3세계(남반부)에 집중적이고 재앙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생태문제는 계급문제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생태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생태재앙은 자본주의 철폐 그 자체만으로는, 또는 생태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예;

노동자 당의 강령

주민 대표자들,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노동자 통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핵시설에 대한 ‘폐쇄나 노동자통제냐’는 전혀 현실의 쟁점이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추상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핵시설 및 핵 안전문제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에 맞서 기밀 철폐와 정보·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감사 및 통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매개로 해서 대중적인 핵시설 폐쇄 투쟁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핵시설의 폐쇄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정치권력을 탈취해서만이,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자통제를 위한 투쟁’ 같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한 전술과 투쟁방향, 조직형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폐쇄’만을 주장하고 마는 것은 노동자당의 강령이 될 수 없다.

양효식

핵발전소)에 대한 노동자통제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와 비견되는 1980년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보여주듯이, 자본가계급이 없는 사회도, 생태적 관점이 없다면 동일한 대재앙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련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원전에 대한 노동자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는 결론은 원전사고나 생태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전세계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 체제로 바꿔야 한다. 유전자 조직과 공장식 축산업,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이 된 농화학농

업을 유기농업으로 바뀌어나가고, 지역을 기본단위로 식량생산과 소비가 생태적으로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들을 자본주의 철폐의 전망과 목표 아래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여성문제와 생태문제는 계급모순 철폐(자본주의 극복) 이후 이뤄져야 할 먼 미래의 과제로 미뤄두거나, 노동과 자본간의 직접적인 투쟁보다 부차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운동은 모든 사안과 문제에 대해 계급적 관점을 갖되, 계급모순 환원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과 생태문제 해결의 선도적 주체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과 생태문제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장혜경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해방을 위하여!

자본주의 핵가족과 여성, 성소수자의 억압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 여성은 ‘노예의 노예’이다. 가장 억압당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이다.

자본주의적 핵가족은 여성억압 그리고 성소수자 억압의 근원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가장 값싼 수단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핵가족을 옹호한다. 현존하는 노동력의 보존과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가사와 육아로 대표되는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노동계급의)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통해 강요한다. 한편 성소수자는 그러한 핵가족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억압당한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노동력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 즉, 호황기에 여성 노동력을 싸게 끌어다 이용하고, 불황기에는 바로 그 편견을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남성우월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옹호되고 재생산되어왔다.

노동자당은 모든 여성억압에 맞서 싸운다. 그 싸움은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억압의 뿌리가 제거되고 매춘, 폭력, 고통스런 결혼의 지속 등 남녀차별과 억압현상이 급속히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때 최대로 실현될 것이다. 여성해방은 사회주의의 지향점 중 하나이고, 사회주의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전제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 여성해방운동의 첫째가는 투사가 된다.

페미니즘은 이 사회가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철폐가 아니라, 남성의 의식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제기한다. 이 페미니즘의 물질적 원천은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여성들이다. 이러한 계층의 여성들에게는 자본주의와 핵가족이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지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르주아 여성운동은 핵가족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등, 피억압 여성을 옹호하고 억압하며, 남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낙태에 대한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의 대응도 페미니즘의 해악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 단체의 요구안은 낙태가 오직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자본과 노동을 막론한 모든 여성이 낙태 문제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제기한 요구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 내에 한정된 것들이다. 하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여성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유한 여성의 경우 낙태의 필요가 훨씬 적고, 불법이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합법인 다른 나라로 가서 시술받을 수 있다. 빈번한 영아유기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문제는 하층여성과 그들의 남성연인들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육아라는 정당한 권리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차별되고 억압당한다. 그 권리를 위해서 억압적 제도, 의식, 관행에 맞선 투쟁과 더불어 물질 토대를 개

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피억압여성과 피억압남성은 이해를 같이 한다.

노동계급 여성의 해방은 노동계급 남성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조직하자!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실업을 해소하자!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고용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여성 차별을 철폐하자! 성노동자의 단결권을 옹호하고, 사회 복지의 실현을 통해 매춘을 종식시키자! 동성애, 매춘 등을 포함하여 합의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모든 개입을 저지하자! 임신여성(부모나 상대남성의 동의 없이도)의 요구에 따른 무료 낙태를 쟁취하자! 무료 ‘출산, 양육, 교육, 의료, 노인 부양’을 쟁취하자! 모든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자!

청소년

청소년들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교육 속에서 ‘불평등은 체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의식을 주입받으며, 지옥 같은 경쟁교육 속에서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극단적인 입시지옥은 극단적인 초과착취와 무한경쟁체제라는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청소년판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교육과 사회체제를 거부할 권리를 지지한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생회를 구성할 권리, 교육노동자 학부모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결권과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지한다.

경제적 종속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부당한 권위에 종속당하게 하는 뿌리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필요할 경우 무상기숙사에 입주할 권리를 지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장정

계급투표? 개뿔! 어처구니가 없다

투쟁을 거세하는 민주대연합, 계급투쟁으로 파산을 선고하자

427 재보선 민주대연합, 기만의 극치

4월 1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버스노조민주화전북투쟁본부는 “버스과업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427 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 분당을, 전주 9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버스총파업을 쟁점화할 것이며, 민주당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주간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민주당에게 버스총파업의 장기화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4월 14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야합을 아래로부터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반MB에 맞선 민주대연합이라는 명제는 노동자투쟁을 거세하고, MB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름없었던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로부터 거부하는 노동자 투쟁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노동자의 투쟁마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이에 영합하는 진보정당의 반 계급성은 바로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폭로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계급투표? 뭘 어쩌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앙은 “계급투표”를 운운한다. 평소에는 계급의 ‘계’자도 꺼려하던 민주노총 중앙은 선거 때만 되면 계급투표를 들먹인다. 그러나

도대체 계급투표가 무엇이란 말인가? 진보정당과 연합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인가? 강원도의 노동자계급과 분당에 사는 노동자계급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인가? 일상적으로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저어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계급투표는 도대체 노동자계급을 표찍는 기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미화, 경비 노동자의 투쟁의 현장에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여러분들 힘들게 투쟁하게 한다. 힘이 없어 죄송하다”는 진보신당 부대표의 발언과 쌍용자동차 고 임무장님 49재에서 “표를 달라. 필요하면 머리박고 투쟁도 해야겠지만, 표가 중하다”는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정

치를 어떻게 사고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노동자계급투쟁이 관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주당과 야합하는 정치꾼들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한편 진보정당이 아닌 대안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통한 반MB만이 살길이라는 진보정당은 철저히 지금의 정치 제도에 안착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하듯 전혀 다른 틀에서 있으니, 진보정당은 언제나 노동자계급 정치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재광

DNA 채취법 : 무능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DNA 채취법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4월 7일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철거민 및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파업 노동자와 철거민을 여타의 흉악범과 동일선상에 놓고, DNA 채취를 요구한 검찰의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기자회견과 여론의 비판이 있따르자, 검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국회가 합의에 의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이며 이는 검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즉, 법을 따르느라 선택의 여지없이 채취할 수밖에 없었

다. 무슨 법 말인가? 바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채취법)이다.

그러나 채취법의 내용을 뜯어보다보면, 검찰의 입장이 얼마나 기묘한지 대변에 드러난다. 채취법 제5조와 6조는 정확히 검사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 수형인 등 으로부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 “검사는 ... 구속된 피의 자로부터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 따라서, 검찰의 입장은 정정됨이 마땅하다.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은, 검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곧 검사의 의무가 된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헛소리의 반대편에, 의무였기에 곧 선택으로 여겨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한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77일 간의 투쟁에서 패배하자, 해고는 연쇄살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에 국가는 무엇을 했던가?

14명의 죽음이 또 다른 77일 간의 투쟁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비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검찰은 DNA 채취를 요구했다. DNA 정보가 자기들 손에 있으니, 다시는 그렇게 투쟁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는 거다. 마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이 아니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투쟁이라는 듯이.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인가? 죽음과 투쟁 사이에서?

원인과 싸우는 투쟁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범죄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까지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 동부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이 채취법의 시행을 환영하며 했던 말이다. 채취법의 기능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인데, “심리적 압박”에 대한 언급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의 이번 DNA 채취 요구는 14명의 죽음을 짊어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국가기구의 무감각과 무능력을 표현한다. 오히려 노동자 투쟁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과 맞서 싸운 77일간의 투쟁, 그리고 현재의 투쟁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민

카이스트 학생은 왜 죽었을까?

경쟁과 서열이 만든 지옥, 희망이 필요하다



최근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을 하고, 교수마저 자살을 하면서 '카이스트사태'가 연일 회자되고 있다. 상위 1% 중 1%의 소위 명문대학의 학생들의 죽음에서 동정과 시기의 감정이 교차된다.

동정의 정서는 이렇다. 오죽하면 그 잘난 학생들이 죽겠냐는 것이다. 2006년 서남표총장이 취임한 후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받던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등

록금제'는 카이스트의 학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경쟁과 서열은 지독한 일상이 되었고, 그 액수도 2010년 기준 157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고액이라고 하고, 해마다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징벌적 등록금'을 냈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기 또는 탐탁지 않은 시선도 있다. 명문대 학생이 죽으니 난리라는 것이다. 하기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등록금마련부담과 생활고를 비판하여 자살한 대학생의 수가 무려 매년 300명에 이른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까지 경쟁에서 승리 하였던 그들이 처음 패배를 맞았다고 죽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그만한 환경에 놓이지 않은 학생들도 무던하게 산다고 비아냥된다.

동정의 시각에서 "징벌적 등록금제"가 폐지된다면, 아니 냉소의 시각에서 더

어려운 학생들도 생각해서 굳건히 살라고 충고하면 학생들은 죽지 않을까? 카이스트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죽음은 세상과의 모든 연을 놓을 만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당장 버틴다 해도, 결국 경쟁과 서열을 강제하는 구조를 벗어날 대안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문대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극한의 경쟁에 생존해야 하는 한국사회 청년의 처지이다. 분노와 절망이 저항으로 표출되지 않고 포기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개인의 나약함에 있지 않다. 기성세대는 386세대의 패기를 청년에게 웅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20년 전 청년들이 유독 강해서가 아니라, 청년에게 나아갈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사회운동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된다. 개인의 영달을 향한 끝없는 고군분투는 반드시 낙오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잠시 뒤쳐져도, 또는 못 쫓아가도 살만할 세상, 그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몫이다.

김태정

[생활의 파문]

자본주의,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이후 전 인류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자연 앞에 무기력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재앙의 실제 피해를 모든 계급이 똑같이 나눠 갖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재해조차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재앙에 취약한 지역, 계층

재앙에 취약한 지역, 계층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매년 가뭄이나 홍수, 산사태에 피해 받는 지역,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농촌, 어촌, 산간지대가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데, 이런 지역에는 대부분 민중들이 산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홍수 피해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혹은 지대가 낮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집중된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도쿄에서는 지역별 건물붕괴위험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

는데,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대부분 노동자민중 밀집지구다. 노동자민중의 집은 지진에 취약하여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자본가의 집은 튼튼하여 지진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정부의 구호, 재건 정책의 불평등

불평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재해 구호 정책, 재건 정책 또한 계급을 차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지만, 구호는 재앙이 있는 지 며칠 후에나 시작되었다. 그조차 영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수십 배 확대되었다. 백인 밀집지구인 다른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구호가 이루어졌던 반면, 피해자가 대부분 흑인이었던 뉴올리언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에서 인종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호의 차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분명하다.

재건 사업의 혜택 또한, 실제 피해자

들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으로 가고 있다. 생뚱맞은 일이다. 미국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입지도 않은 마라톤 오일이 정유소 확장 명목으로 10억 달러의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안 원유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데서도 혜택을 받았다. 엑손모빌도 세금혜택을 바탕으로 7천 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별도로 세금 없이 3억 달러를 차입했다.

이렇듯 재앙은 자본가들에겐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피해로 몰바다가 되었을 때 정치인들과 개발업자들은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켰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의 상황은 다를까? 한국에서도 재앙은, 있는 자들에게는 구호 혜택을 때어먹을 기회, 개발사업을 진행할 기회일 뿐이다. 피해는커녕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그들이 재앙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앙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거대한 재앙 이후에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들에게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주택이 보급되지는 않는다.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치 재개발 사업에서처럼 피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파탄 난 재해민들의 삶은 수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앙의 피해를 입지도 않은 기업은 재건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이는 고스란히 자본가들의 차지이다.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박살내지 않고서 노동자의 삶은 보장될 수 있을까?

조영태

복지국가 건설? 420 투쟁을 보라!

복지담론, 또다시 장애인과 노동자를 무시하고 대리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 외면하는 이명박의 강통복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정치권, 학계 등 이곳, 저곳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들이 제출되고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박근혜 지지 세력에서부터 진보신당에 이르는 각 정치집단들이 '복지'라는 카드를 제출하고 있다. 얼마 전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어느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된 기사에서 흑자는 '6월 항쟁의 정신을 복지국가로 이어가야 한다.' 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부르짖는 이들은 그동안 뭔가 복지국가의 단초라도 마련하였는가?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그 대답을 보여준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지난 10년의 민주당 정권 시절 그들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었다. 민주당 정권 기간 내내 그들이 복지정책으로 내놓았던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노동연계 복지'는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의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런 기본 관점은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편없는 보장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보장내용과 독소조항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던 최옥란이라는 장애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녀가 산화한 3월26일은 이제 매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

고 있다.

복지국가 담론에는 없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만 있는 것 정치집단들이 내놓는 복지국가 건설에는 없지만,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그들이 진보적이든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어떤 특정한 정치정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제출하고, 계급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건이다.

대리주의 정치를 박살내자!

그렇다. 복지국가 담론에는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계급적,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다. 오히려 그들의 복지국가 담론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자신들에게 투표하라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대리정치를 강화하고,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내세워 또다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소외를 반복 강화시킴으로써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의 필수 요소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투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 가난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지국가 건설? 420을 보라!' 라고 말한다.

이승헌

시혜적 복지를 깨고! 장애해방 쟁취하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권 쟁취하자!

올해 장애인 투쟁은 3대 법안을 제 개정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적인 투쟁의 기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더구나 한국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설정해놓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소고기도 아닌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어떻게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장애가 있는 노부모가 본인의 얼마 되지 않는 임금 때문에(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경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바로 그것은 장애인의 몸을 '노동할 수 없는 몸', 더 정확히는 '자본에게 잉여가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몸'이라고 보는 자본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장애인의 존재와 장애인의 노동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거침없이 모든 사회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몸에 대한

자본의 시선을 거부하고, 동시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거부해야 한다.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며, 장애인의 존재와 노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내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의 급진적 투쟁이 자본주의를 폐절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지 모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은 비장애인의 노동권과 같다!'고 외치며, 노동자민중이 노예적 굴레를 깨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장애인의 투쟁 역시 현재의 복지담론에 갇혀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투쟁으로 전락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모두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무참히 깨져나가고 연기되었다. 이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더욱 급진적으로 투쟁하자! 복지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문열

동지의 후원이 미래를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희미하고 먼 미래의 안개 낀 수식어가 아니라, 자본의 착취와 폭압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해방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동자의 무기입니다.

사노위를 후원하십시오.

농협 352 - 0136 - 9090 - 13 (이경수)